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환경단체 의견

지난 5월 8일 건교부는 수도권내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김포·파주 지역일대를 신도시 건설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을 우려하는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6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을 기정 사실화한 채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 건설 예정지 추가선정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에 국토발전에 있어서 금세기 최대의 난제인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을 우려하는 시민사회환경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신도시 건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기조에 정면 위배된다.

김포·파주를 비롯한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추진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기조의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의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또 다른 인구를 수도권으로 불러들였고 이들을 위한 노동공간과 산업시설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수도권 내 신도시는 애초의 자족기능 목표를 일체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보건시설 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서울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거미줄과 같은 도로망은 대량의 교통량을 유발시키면서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물론이고 서울에의 의존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신도시 건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김포·파주 신도시 계획 내용에 반영되어 있는가?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추진은 수도권 내의 산업 및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기존 수도권 확장 정책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면 출범 당시 내세운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기조,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은 종이호랑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 주택난 가중,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건설, 또 다른 인구유입과 주택난 가중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것인가?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게 하는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이라는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의 임무는 이제 시대적 소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한 택지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신도시 건설만이 수도권 주택공급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 취지로 주택가격의 안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상승은 결코 주택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닌 주택·부동산 정책을 잘못 실현한 데서 기인한다. 1가구 2주택 중과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주택투기를 사회적으로 조장했으며 소형평수 아파트 의무화 비율을 폐지함으로써 경제능력이 없는 실수요자는 주택소유에서 소외되고 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제를 철저히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공급이라는 1차목표보다 건설로 인한 이윤확대관심만 유발시켰다. 이러한 주택·토지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패는 전국민

으로 하여금 투기에 대한 열망을 부추겼고 투기행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현실정책의 실패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신도시 건설만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내세운 주택가격안정의 취지는 명분일 뿐이고 실상은 건설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신도시 건설일 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신도시 건설만이 수도권 내 주택부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주택공급은 녹지, 농경지와 같은 미개발지에 대한 신규개발이 아니라 “토지재활용” 개념을 도입하여 이미 개발된 지역의 재개발과 주택활용 등을 통해 기개발지 수용량을 늘리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도외시함으로써 택지개발과 신도시 건설을 통한 건설이익 창출이라는 본연의 의도를 공공연히 입증시키고 있다. 정부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신생도시를 만듦으로써 서울에의 의존과 수도권 집중을 발생시키는 신도시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토지재활용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김포·파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난개발을 중앙정부의 신도시 건설로 방지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 취지 중의 하나로 김포·파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개발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나설 것이 아니라 별도 차원의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앙정부가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하는 것으로 결코 만족될 수 없다. 지역의 성장과 발전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지역 NGO의 상호보완적 관계와 합의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위한 통합과 조정의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참여정부 스스로 마련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는 것은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한 대규모 개발 이익을 노린 사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넷째, 대규모 개발로부터 보전되어야 할 자연환경보전가치 우수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김포 신도시의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고 파주 신都市는 파주시 교하면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다. 이중 김포시 해당 지역의 경우 철새의 서식, 휴식, 번식지로 각광받고 있는 오두산 전망대, 김포시청 주변 한강변 별관의 인근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다.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된 김포 대상지역은 직접적 철새 서식지는 아니지만 재두루미와 두루미의 이동로상에 위치하여 철새들의 휴식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간이 신도시 건설로 인해 대규모 주택,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되면 이 지역 일대를 찾는 철새들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며 주요 서식지인 오두산 전망대와 한강변의 가치도 저하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 지역 일대의 신도시 건설 예정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면서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김포지역 일대 자료는 철새가 오지 않는 여름철 7, 8월에 조사된 데

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철새들이 많이 찾는 김포지역은 실제 철새들을 볼 수 있는 겨울철 1, 2월 조사 결과를 통해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핵심내용은 뒤로 한 채 개발을 위한 수순을 밟으면 된다는 식의 정부의 무성의한 형식적 과정은 강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이에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백지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수도권 집중 억제, 국토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시민사회환경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방분권실행,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즉각 제시하여야 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기 이전에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국정개혁과제를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나설 것이 아니라 통합, 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의 발전은 중앙정부가 하루아침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에 의한 합의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우리 1만인은 정부의 일방적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 지방분권국민운동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